

세계도시

2006. 6. 19 제145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건물 매도나 임대 시 증대한 위험사항 고지 의무화 (파리)
2. 공기업 민영화 여부로 연방정부와 심각한 갈등 표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3.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새로운 바람 기대 (일본 카나카와시)

디지털 도시

4.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기반 무선통신기술 장비 활용으로 빠른 대민 서비스 제공 (런던 이즐링튼區)

복지·문화

5. 도시경제를 살리는 거리문화축제 개최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시)

도시환경

6. 대도시 환경인프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설공원제도 도입 (동경)
7.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지원정책 촉구 (영국)
8.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이용한 발전시설 건설 (일본 후쿠오카縣)
9. 도시미화 사업 추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10. 에너지 절약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 (베를린)
11. 초등학교에 지속가능성 교육 실시 (영국)
12.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강조 (영국)
13. 일본 내 최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대책 가이드' 작성 (동경)
1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가기업 잇따라 (일본)

도시교통

15.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방지 긴급대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16. 민간감시원 도입으로 불법주차 격감 (일본)

도시계획·건설·주택

17. 에코 커뮤니티(eco-community) 개발 설계대회 계획 발표 (영국)
18. 도로 및 지구정비계획에 시민이 직접 참여 (파리)
19. 인프라 개선에 향후 10년간 약 77조 원 투자 계획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20. 러브호텔 신축 금지 연내 시행 추진 (동경도 시부야區)

1. 건물 매도나 임대 시 중대한 위험사항 고지 의무화 (파리)

파리市는, 2006년 6월 1일부터 건물을 팔거나 임대할 때 건물 매도인과 임대인이 건물과 관련된 위험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입자나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홍수위험 방지 대책과 오래된 도로나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 붕괴와 관련된 위험 방지대책 등을 규정한, 2006년 2월 14일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기술적인 위험이나 지진 관련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양식은 파리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19827&portlet_id=815)

2. 공기업 민영화 여부로 연방정부와 심각한 갈등 표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는, 연방정부와 공동출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민영화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해 온 거대 공기업인 스노이 하이드로(주)는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 뉴사우스웨일스 州정부가 58%, 빅토리아 州정부가 29%, 연방정부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반대여론을 빌미로 민영화 불참을 발표함에 따라 민영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를 매각해 도로, 교통, 병원, 학교 등의 인프라 확충 재원에 충당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이엠마 뉴사우스웨일스 주지사는 연일 언론을 통해 연방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인프라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집권당이 다른 것이,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 州정부가 정책 갈등이 자주 표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5. 30)

3.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새로운 바람 기대 (일본 카나카와市)

일본 카나카와(神奈川)市 주최로 2006년 6월 3일 카나카와市 사이와이(幸)區 시립 산업진흥회관에서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직업 스타일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포럼이 개최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사회의 과제나 수요에 대응하고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의 체설작업, 상점가 쇼핑 대행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수발, 육아, 재활용, 마을 만들기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해 현재는 NPO 법인인 미래도서관을 운영하는 구보(久保) 이사장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입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구보 이사장은 이와테(岩手)縣에서 위탁받아 그 지방에서 재배된 야채를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한 경험이 있다.

(www.tokyo-np.co.jp/00/kgw/20060604/lcl_____kgw_____001.shtml)

디지털 도시

4.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기반 무선통신기술 장비 활용으로 빨빠른 대민 서비스 제공 (런던 이즐링튼區)

런던 이즐링튼(Islington)區는 주로 현장에 나가 활동하는 區 직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인력 500여 명에게 PIM(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기반 무선통신기술 장비를 지급해 활용중이다. 이 장비는 區 행정 전산시스템과 연동되며 인터넷 환경과 무선 연결되어 업무에 필요한 전자메일 송수신과 업무연락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현장에서 활동하던 직원들이 굳이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신속히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이동성이 낮은 데스크톱과 고가의 노트북과 같은 기존 사무용 컴퓨터 활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區 정보기술 담당 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150개소 이상의 현장(4500명의 고객)을 관리할 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 장비 개발이 시작됐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이동통신회사인 O2사와 컴퓨터통신 솔루션 업체인 Handheld PCs사의 기술을 접목해 현장 활동 일반 공무원까지 무선통신장비를 활용하게 됐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036&mode=thread&order=0&thold=0)

복지 · 문화

5. 도시경제를 살리는 거리문화축제 개최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市는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에머리빌市 공공미술위원회가 주최하고 市가 지원한다. 市는 13명의 작가를 공식 초청하고 이들의 작품을 전시해 시민이 공공미술을 볼 기회를 마련했다. 작가들은 비디오, 조각, 사진, 기타 문화예술 설치물을 거리나 거리주변 건물에 전시했다. 도보 관람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이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 부여,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 효과가 있다.

(www.ci.emeryville.ca.us/news/pdf/website.pdf)

>>> 전문가 검토의견

공공미술에 대한 시민의 향유와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참고가 된다. 에머리빌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보관광과 결합해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Percent for Art' 조례로 기업은 의무적으로 공공미술 설치와 공공미술 기금 조성을 해야 한다. 국내의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아직 초보적 수준인데 이와 같은 커뮤니티 아트 개념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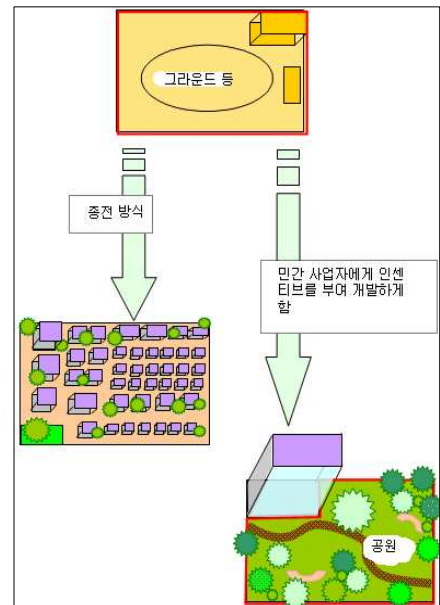
/백선희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6. 대도시 환경인프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설공원제도 도입 (동경)

동경都는 기존의 공적 기관에 의한 공원정비 외에 새롭게 민간활력을 활용해 도시계획 공원 및 녹지를 조기에 정비해 공개하는 사설공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都가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도 조기에 공원을 정비하는 이점이 있다. 都는 이 제도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도시계획공원 규제를 완화해 부지 일부에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보유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설공원 정비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부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하며, 최소 35년 이상 일반인에게 계속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가 입안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대도시 환경인프라 재생사업 중 하나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5/20g5u500.htm)



민영공원 정비 개념도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좋은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공개공지의 녹화나 옥상녹화 등을 통한 민간 참여방식의 공원 및 녹지공간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 시책으로 市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에서 건축계획시 일정 면적을 공원화해야 하는 것을 네이밍(naming)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도심내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정책과 맥을 같이 해 이 시책을 도시계획과나 공원과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보유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 여부에 따라서 시책의 실효성과 확대가 좌우된다. 이와 관련한 정비를 위해 규모 및 기준 작성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한 줄 뉴스

<북경>

- 중관촌에 6월 1일 국가 인터넷 게임·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기지 설립
- 5대 황사피해 집중지역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초목 파종' 프로젝트 시행
- 투자촉진국에 '외국인 투자 전용 통로' 설치. 2006년 1~4월간 외국인 투자 총액 7억 4000만 달러(약 670억 원) 달해
- 2010년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을 GDP의 6% 수준까지 늘린다고 발표

7.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지원정책 촉구 (영국)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 에탄올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서머셋(Somerset)市는 바이오 에탄올 차량 40대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영국 최대 규모다. 市는 바이오 에탄올 급유기를 최초로 공개하며 市에 도입된 저공해 차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120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최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발표한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저공해 차량 정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www.lga.gov.uk/PressRelease.asp?id= SXFF04-A7838EA7)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가운데 자동차 운행에 의한 배출량이 70%를 초과할 만큼 매우 높아, 저공해 자동차 도입 확대 및 운행 촉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현행 '서울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용해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켜 혼잡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8.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이용한 발전시설 건설 (일본 후쿠오카縣)

일본 후쿠오카(福岡)縣 오키(大木)町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발효시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시설에 이용하고 나머지를 유기비료(액체비료)로 재이용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분뇨까지 재활용 대상으로 삼는 시도는 일본에서 처음이다. 이 시설은 2005년 11월부터 약 2헥타르 면적에 건설 중이며, 2006년 11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3.8톤과 분뇨나 슬러지 37톤을 혼합해 발효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태워 발전한다. 전기는 플랜트 내에서 유기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007년부터 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에 주목해 농수성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함께 재이용하려는 새로운 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의 선진 사례로서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하수처리시설로서도 의미가 있다.



바이오 가스 플랜트의 완성 예상도

(kyushu.yomiuri.co.jp/news/ne_06050922.htm)

9. 도시미화 사업 추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는 도시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국 도시미화 사업'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추진 중이며 시민이 지역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직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오클랜드市의 경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천미화 사업, 주민이 1년간 참여를 약속하는 지역미화 사업, 市가 청소장비를 빌려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사업,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 거리에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꾸는 사업 등이 있다. 오클랜드市의 도시미화 사업은 市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꾼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www.oaklandpw.com/Page111.aspx)

10. 에너지 절약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 (베를린)

2006년 5월 31일 개최된 '2006년 유럽 에너지 서비스상' 시상식에서 베를린市가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베를린'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최고 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베를린'은 1996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로, 공공과 개인의 파트너십을 통해 베를린市와 지자체들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에너지 효율과 기후보호 개선조치를 추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대학 등 공공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약 25% 줄였고 해마다 6만 톤 이상의 CO₂ 배출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40만 유로의 市 예산을 절약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5/nachricht2295.html)

11. 초등학생에게 지속가능성 교육 실시 (영국)

영국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미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왜 학교에 걸여가는 것이 좋은지, 전기와 물을 어떻게 하면 아껴 사용할 수 있는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실천이 담겨 있다.

(www.rudi.net/udunews/index.cfm#starting)

12.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강조 (영국)

영국 '비즈니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센터'는 2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있어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쓰레기는 보통 수집과 재활용, 매립과정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므로 지방정부 중심의 현 쓰레기 관리체계의 개선 및 교통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로와 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일괄수송 이용을 강조하면서 쓰레기 수집과 분류는 구청 단위에서 진행하고 재활용과 재사용 처리는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 과정에서 쓰레기시설과 교통시설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Planning, 2006. 5. 17)

13. 일본 내 최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대책 가이드' 작성 (동경)

동경도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광화학 스모그나 부유 입자상 물질의 생성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VOC 배출 삭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 VOC 배출 규제가 시작됐는데, VOC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삭감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도장(塗裝) 분야와 중소기업장에서 자발적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동경도는 자발적인 VOC 배출 억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동경도 VOC 대책 가이드'를 작성하게 됐다.

동경도 VOC 대책 가이드는 VOC 배출 억제 방법을 총망라해 정리한 일본 최초의 가이드이며, 공장 내부편과 옥외 도장에서 저VOC 도장 사양을 정리한 옥외 도장편으로 나뉘어 있다. 공장 내부편은 都内에서 VOC 배출량이 많은 도장, 인쇄, 금속표면처리, 세탁의 4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억제대책이 중심내용이다. 공정 개선, 원재료 전환, 처리장치 도입으로 구분해 억제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책별로 VOC 삭감 효과와 비용을 수치화해 열거했다. 옥외 도장편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저VOC 도장사양을 정리했는데 구조물과 소지면(素地面)별로 나눠 설명하고, 도장 사양별로 VOC 삭감률, 내구성, 비용을 수치화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5/20g5q200.htm)

한줄 뉴스

- 영국 전역에서 2006년 5월 22일부터 1주간 열린 '걸어서 학교 가기 주간' 행사에 어린이 200만 명 참여
 - 런던교통공사는 걸어서 학교 가기 활성화 프로그램에 500만 파운드(약 88억 원) 예산 지원
- 유럽 주요 도시들, 2006년 9월 16일부터 1주일간 '카 프리 시티(Car Free City) 주간' 행사 개최
- 베를린市,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 컨테이너 새 단장

1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가기업 잇따라 (일본)

일본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온실가스의 배출권 거래에 기업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교토 메커니즘은 기업 등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삭감한다면 삭감한 만큼을 자국분(自國分)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삭감사업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에너지 절약기술이 발달한 선진국 입장에서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41건의 CDM 사업을 승인했다.



마루베니社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력 발전 사업

예를 들면, 마루베니(丸紅)社는 2007년부터 중국의 프레온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프론가스(HFC23)를 회수·분해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으로 CO₂ 환산 580만 톤, 약 38억 엔(약 320억 원)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배출권을 정부나 다른 기업에 전매하면 10억 엔(약 84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외에 마루베니社는 한국에서도 풍력발전 사업 CDM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도쿄 전력은 칠레 양돈장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태우는 CDM 사업을 실시한다.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CO₂의 21배로, 연소시키는 것만으로도 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2004년부터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장기 중지로 인해 화력발전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향후 배출권 구입으로 CO₂ 삭감 목표치를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 가격이 10년 후에는 2배로 상승한다는 예측 아래 가격 상승 전에 충분한 배출량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www.yomiuri.co.jp/atmoney/special/47/naruhodo236.htm)

한줄 뉴스

-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 2006년 5월 24일부터 한국 관광객 유치 위해 한국어로 관광 웹사이트 개설
- 시드니市, '퐁초팀'(butt force)으로 불리는 비밀단속원이 담배퐁초 무단 투기에 대한 암행 단속 시작

<동경>

- 임해부에 슈퍼 에코타운 사업을 실시할 민간사업자 공모
- 코카네이市, 어린이 보호 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매일 저녁 중학생의 피아노 연주곡을 방재행정무선을 통해 내보내

15.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방지 긴급대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말 이전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학교 건널목에 전자 발광 감속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2007년 말까지 모든 해당 학교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감속 경고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모리스 이엠마 주총리는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예산 3억 호주달러(약 2100억 원)를 별도로 마련하고 스쿨존에 설치되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생기는 교통범칙금 전부를 학교 건널목 교통사고 방지 대책사업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건널목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감점 포인트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에릭 로젠달 도로교통부 장관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혹독할 만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부 최우선 정책은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 예산만으로 교통 안전대책에 따른 여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후원도 받을 계획이다

(search.smh.com.au/siteSearch.ac?q=school+zone&ss=smh&x=16&y=6)

>>> 전문가 검토의견

스쿨존 사업은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스쿨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스쿨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호주에서 시행하려는 단속강화 및 규제, 충분한 예산지원 등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스쿨존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신혜 도시교통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16. 민간감시원 도입으로 불법주차 격감 (일본)

일본은 2006년 6월 1일부터 주차위반 단속 민간위탁 등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264개 경찰서 관내에 총 1578명의 민간감시원이 단속활동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단속 전 10~30분의 유예시간을 두었던 것에 반해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에서 떨어지면 주차 위반이 되는 등 단속이 엄격해졌다. 민간감시원을 도입하지 않은 동경都 타마지역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즉석에서 적발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대부분 지역의 단속 건수가 평상시의 10%에 불과했고 시즈오카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다. 상점가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상점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되었다. 시민들은 예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위험했다면서 강화된 단속 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우편·소포의 집배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택배차량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민간업체는 불평하고 있다. 택배업체는 기존에 차량당 택배원 1명을 배치하던 것에서 택배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www.yomiuri.co.jp/atcars/news/20060601ve03.htm)

17. 에코 커뮤니티(eco-community) 개발 설계대회 계획 발표 (영국)

영국 도시재개발공사는 매년 해오던 저비용 서민주택 설계대회와 함께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저배출, 저비용의 에코 커뮤니티 설계대회를 영국의 6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의 설계대회가 주택 하나에 대한 저비용과 친환경적인 공법 개발이었다면, 에코 커뮤니티는 소규모 주거단지 전체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는 대회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주거지 개발의 새로운 설계규정과 법제도적 장치를 찾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관계자는 주택개발회사들도 앞으로는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generation and Renewal, 2006. 5. 19)

18. 도로 및 지구정비계획에 시민이 직접 참여 (파리)

파리市는 각 지역에서 도로나 지구정비 등을 계획할 때 관련 자료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제안을 수렴해 실제 도시정비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회에는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 도시계획은 주로 녹지와 주거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도로정비 등 실제적인 도시생활의 미래와 관련된 도시정비계획은 주민 의견이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의회 활동의 예로, 파리 10區의 경우 현재 '에슈끼에 길'(la rue de l'Echiquier) 근처 공간 정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www.conseilsdequartiersparis10.org)

19. 인프라 개선에 향후 10년간 약 77조 원 투자 계획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이엠마 총리는 2006년 5월 30일에 발표한 '인프라 개선 10년 마스터플랜'에서 노령화 시대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州정부는 향후 10년간 1100억 호주달러(약 77조 원)를 인프라 확충에 지출할 계획이고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중 상당부분이 州정부 차관으로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州정부 부채는 지난 1997년 76억 호주달러에서 230억 호주달러로 늘어 2009~2010년에는 360억 호주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집중투자 대상은 도로 및 교통, 수자원 확충 등 에너지 분야, 공립병원, 공립학교 등이다.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공립학교 신축 중 일부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될 예정이다.

(www.treasury.nsw.gov.au/sis/sis-2006.htm)

20. 러브호텔 신축 금지 연내 시행 추진 (동경都 시부야區)

일본 동경都 시부야區는 2006년 6월 정례회 때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는 '러브호텔 건축 규제 조례안'을 제안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있는 러브호텔이 청소년 매춘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 주목해 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건축물이 러브호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업자명을 공표해 6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약 4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룸맨션 형태의 불법 건축도 성행하고 있어 설계도에 부속이 없는 경우 더욱 엄밀하게 건축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도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區는 러브호텔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어린이 공원과 학교 주변 100m 이내 지역에는 여관업법상 호텔 영업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001.htm)

한줄 뉴스

<런던>

- 런던개발청과 그린피스 공동으로 템스강 하류의 템스 게이트웨이(Thames Gateway) 지역에 이산화탄소 무배출 생태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 2006년 9월 2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제4회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Liberty' 개최 예정
- 런던에서 살려면 시간당 7.05파운드(약 1만 3000원)의 임금은 받아야
 - 현재 시민 대다수가 시간당 6.15파운드(약 1만 1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
- 런던개발청, 총 300만 파운드(약 54억 원) 규모의 R&D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의료산업 분야 등 29개 업체 선정
- 수년간 끌어오던, 템스강 사우스 뱅크(South Bank) 지역의 쥬빌리 공원 계획 마침내 승인
- 껌 공해 방지 모임(Chewing Gum Action Group)이 15개 구청과 함께 껌 공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예정
 - 껌을 길에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16만 원)을 부과하는 법 지난 4월에 제정